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
기요양기관인 ○○○○○○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20○○. ○. ○○. ~ ○. ○.)
결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해진 면제 및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처분사전통지를 하였
고, 20○○. ○. ○○.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제5항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15
일(20○○. ○. ○. ~ 20○○.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급자 ○○○(○○년생)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보호자인 아들
○○○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월 4만 원 정도만을 납부한 것으로 감액하여
준 것이 아니다.

나. 수급자 ○○○(○○년생)의 경우 이 사건 센터 이용 시작 시에는 본인부담

금이 면제되었으나 이용하던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변경
후 첫 달에는 전액 입금하였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만
납부하였다가 사망 후 딸이 미납금을 전액 입금한 것으로 감액하여 준 것이 아
니다.

다. 수급자 ○○○(○○년생)의 경우 처음에는 본인부담금을 잘 납부하다가 몇
개월 후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여 보호자인 며느리에게 연락했으나 전혀 신
경을 쓰지 않았고, 담당 요양보호사가 반찬을 해서 어르신 댁에 가져다 드릴 정
도였다.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른 수급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센터의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
하기 위하여 수급자로 유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여 준 것이
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의 수급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위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연체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이
용하게 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감액하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수급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유치한 상황인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수급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애초 수급자
발굴·유치과정에서 ‘합의’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행위를 한 청구인
의 사례와는 맞지 아니하여 관련 판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지난 현지조사과정에서 을제4호증 현지조사 문답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수급자와의 ‘합의’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급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미납한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의 주장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 ○○○의 보호자 ○○○의 문답서에 의하면, 최초 계약시 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4만원만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계약후 감경받아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수급자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얼마인데, 얼마만 입금하라’는 문자가 오면 그 금액대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수급자 ○○○의 보호자 ○○○의 문답서에 의하면, 계약시 일정기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다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합의하에 9만원으로 납부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수급자 ○○○, ○○○, ○○○는 모두 청구인과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수급자를 유치하고 센터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2) 20○○. ○. ○○. 제기된 민원제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 ○○. ~ ○. ○. (4일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해진 면제 및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 ○. ○○.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 ○. ○○.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제5항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15일(20○○. ○. ○. ~ 20○○. ○. ○○.)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제나 제40조제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를 제공한 후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5/100를 둘러싼 경쟁의 과열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공단에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 등을 들어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는 수급자 본인이 지급하게끔 정한 취지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의 85/100을 지급받고, 나머지 15/100은 수급자로부터 지급받는 구조인데, ① 을제1호증 수급자 ○○○의 보호자인 ○○○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처음 계약시 약정하기를, 20○○년부터 20○○. ○.까지 한달에 4만원 정액을 계좌로 납부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계속하여 계좌이체중이라는 사실, ② 을제2호증 수급자 ○○○ 본인과 전화문답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다가 부담된다고 하니, 센터장이 금액을 줄여주었고, 매달 문자로 실제로는 얼마인데 얼마만 입금하라고 안내가 오면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 ③ 을제3호증 수급자 ○○○의 보호자인 ○○○와의 전화문답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12만원 정도 납부하다가 서비스시작 후 5개월 정도쯤부터 센터장과 합의하여 9만원 정도 납부했다는 사실, ④ 을제4호증 센터장인 ○○○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은 계좌이체로 거의 받았고, 청구시 본인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으며, ○○○ 수급자의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금액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⑤ 또한 ○○○ 수급자의 아들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형편 때문에 합의에 의하여 월 4만원 정액만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액하여 주거나 감액 합의를 하고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회보장적 급여비용을 공단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의료법에 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7. 8. 17. 선고 2017도7134판결)” 이라고 보고 있는바, 꼭 그 사안에서 행위로 인한 이익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부분 상 꼭 본인부담금 납부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다른 수급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인데, 아예 처음 계약시부터 정액의 금액을 합의하거나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액을 감액해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수급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리의 목적을 넓게 보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적인 본인부담금 면제·감액을 금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